



대중국 환율법안, 미 상원 통과

왕양비 연구원

- 10월 3일 미국 상원은 위안화 절상을 종용하는 「2011 환율 감독 개혁 법안」을 통과시켰으며, 동 법안의 최종 통과에는 하원과 백악관의 승인이 필요함.
 - 「2011 환율 감독 개혁 법안」은 미국 재정부가 타국 환율이 조작됐다고 인정할 때 해당 나라를 대상으로 90일 내의 벌칙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.
 -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현행 미국 「관세법」은 환율조작국 인정에 대해 고의적 환율조작의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데, 금번 법안은 규정한 환율조작국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됨.
 - 또한, 동 법안은 환율조작을 이유로 상무부에게 경쟁기업 상품을 대상으로 벌칙 관세 부가 신청 권한을 기업에게 부여하는 것임.
 - 반면, 현행 법규는 특정한 나라의 환율정책이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관세 부가의 이유로 활용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봄.
 - 미국의 입법 절차에 따르면 어떤 법안이 전체 상원 의원의 3/5(60표)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한 변론이 중지되고 하원에 제출해 투표를 진행해야 하나, 하원 투표가 부결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안은 폐기됨.
- 많은 미국 기업(특히, 글로벌기업)과 경제단체가 동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, 위안화 환율의 과소평가 정도와 과소평가된 위안화 환율이 실질적으로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인 것으로 보도됨.
 - 상원의 「2011 환율 감독 개혁 법안」에 대한 투표 일주일 전, 미국상공회의소(U.S. Chamber of Commerce)는 동 법안이 역효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상원에 제출함.

- 미국 제조업자협회(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)는 동 법안에 대해 회원들의 통일된 의견을 얻지 못해 공식적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으나, 많은 회원 기업들이 동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.
 - 국제통화기금(IMF)은 위안화 가치가 크게 과소평가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, 그 정확한 폭은 알기 어려운 실정임.
 - 미국경제연구소(Economic Policy Institute)는 2001~2010년 동안 미국의 대(對)중국 무역 적자로 인해 미국 내 2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함.
 - 그러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(St. Louis Federal Reserve)은 위안화 절상으로 일자리가 중국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옮겨질 뿐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.
- 동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된 후 중국 중앙은행, 외교부, 상무부 등이 즉각 반발하였고, 미국 하원 의장과 백악관도 동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.
- 10월 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동 법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며,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 원인이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함.
 -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동 법안 통과 시도는 세계무역기구(WTO)의 원칙 위반이며,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함.
 - 상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간 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은 위안화 환율이 아니라 국제적인 분업 현상과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, 미국에 대한 중국의 재화수출은 흑자이나 서비스 수출은 장기간 적자라고 발표함.
 - 또한,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과거 10년간(2001~2010년) 중국의 대(對) 미국 수입액이 192억 달러에서 919억 달러로 379% 증가하였다고 강조함.
 - 뿐만 아니라 4일 미 하원의장 존 보너(John Boehner)는 국회가 입법 형식으로 위안화 환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고 말하며, 동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.
 - 아울러, 백악관 대변인이 동 법안의 통과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환율조작국을 대상으로 환율 간섭을 중지하라는 것과 같은 국제 의무의 통일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백악관은 동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힘.

(봉황재경, 매일경제신문, WSJ, 인민은행 10/04 등)